

칼럼

김 화 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삼성 이사회가 움직일 때

삼성그룹이 지난 9일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 발족을 알렸을 때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의사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룹 차원의 외부 준법감시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성그룹 총수(동일인) 이 부회장의 의지 확인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 '준법' 감시위원회이며 최고법관 출신 위원장이 법률 전문가들을 포함한 외부위원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이 부회장이 아니라 형식적 그에 걸맞아야 바람직하다.

이 부회장은 그룹의 동일인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큰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이사가 아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대주주이자 삼성의 경영을 총괄하는 최고경영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굳이 상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제 기업 경영의 종국적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주주총회가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가 경영자들에게 구체적인 경영 권한을 위임한다. 모든 법률적 책임은 이사회가 지닌다.

중대 이 모델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형식적인 기구인 경우가 많았는데 유사시 회장이 모든 책임을 다져 주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들이 수심익씩의 손해배상을 져던 한 판결 후에도 회장이 다 부담하고 이사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례도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회장 리더십의 원천이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회장도 점

점 사라지고 있고 신세대 회장들은 그럴 여유도 없다. 법전에 나오는 대로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시대다. 그렇긴 해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인식이 아직 남아있었는데 그를 바꾸는 사건들이 최근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엘리트층으로 대표되는 행동주의 주주들의 등장이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전형적인 경영판단에 해당되는 사안들로 경영진을 압박하다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이사회 진출을 시도한다. 성공하면 사내이사를 못지 않은 전문성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이 때문에 이사회는 이제 명실상부한 기업지배구조의 허브가 되었고 사외이사들은 전문성과 경영진 감시 측면에서 이들을 따라가야 하게 되었다. 서구에서는 종래의 '조용한' 이사회 모델이

사라지고 점차 '내부 행동주의' 모델 이사회가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이사회 3.0'이다.

삼성은 지금 사업 외의 문제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데 대부분 법률적 문제들이다. 삼성전자는 이사회 의장이 구속되었다. 이쯤 되면 삼성 각 계열사 이사회가 스스로 개혁 의지를 과감하고 필요한 작업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조용하다.

불가피하게 외부 준법감시위원회가 도입된다 해도 그 정당성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각 사의 이사회다. 준법감시위원장이 이 부회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칫 구시대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각 사 이사회의 개혁 의지와 협조 의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어야 했는데 그 점이 아쉽다.

참여연대도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혁은 그 초점을 이사회에 맞춰야 한다. 기능의 개선,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조직의 쇄신 등이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 받는 준법감시위원회에 각 사의 사외이사를 포함시켜 정당성을 보장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社 說

### 선거범죄 벌금형 가중돼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더니 기대가 크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형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기존 1천5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높였다.

공직선거법상 매수행위는 후보자에서 사퇴하거나 후보자가 되길 포기하도록 하려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특정한 직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후보자가 되길 포기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는 것을 뜻한다. 이익을 준 사람 모두가 처벌받으며,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오가도 처벌 대상이다.

양형위원회가 새로 의결한 기준안에는 구체적 매수 유형별로 벌금 상한선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나와 있다.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유형은 700만원에서 2천만원,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벌금형 상한이 높아졌다.

허위사실공포 및 후보자 비방 범죄도 권고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바뀌었다. 이는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 전후로 적발된 선거사범들은 엄격해진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관보게재 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오는 2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건부터 수정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가 선거사범의 획기적인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겨울철 화재예방은 가스렌지 점검확인 습관화 해야

오늘날은 고도의 산업발달과 도시화로 인하여 전기·가스 및 위험물질의 사용증가 등으로 화재 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 추세로 보여지고 있으며, 귀중한 생명, 농수산물·자동차 부품 창고화재 등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 여건을 감안할 때 주택화재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배선과 콘센트는 고정을 잘 시키며 1개의 콘센트에 3~4개 이상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기누전, 전기기구 과열·과부하를 막는다. 전기배선, 전자제품은 한국공업규격 제품(K.S)을 꼭 사용하고 노후·불량·비닐전선 교체, 과전류 차단기 및 스위치는 작동상태가 정상인가 확인을 한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코드는 항상 뽑는다는 습관을 갖는다.

특히 5년 이상 사용한 전기제품은 평상시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가스배관 연결부분과 연소기(가스버너), 중간밸브 부분 등 가스가 누설 되는가 비누거품으로 점검하며, 가스버너를 사용할 때는 자리

를 비우지 말고 맛있는 요리를 다 하신 후에 소화 코크밸브와 중간밸브를 꼭 잠근다. 가스용기나 가스보일러 설치 장소에는 통풍이 양호하고 매일 점검한다.

외출 전·후 주택안에 가스가 누설하여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10여 분간 이상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시킨 후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 LP가스 용기는 옥외에 보관하고 고를 만들고 저장온도 40도 이하로 유지하여 저장한다.

등유·경유 등 위험물을 취급할 때 유류탱크는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로 된 건물이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보일러탱크주위를 매일 청소로 실시하며 화기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다. 이동식 석유난로나 차량에 연료

주입 할 때 점화스위치나 시동을 확실히 끄고 연료를 주입한다. 외출할 때에는 가스차단, TV·방송 전원스위치 차단 등 안전점검을 하고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이상이 없는 가 확인점검을 생활화 한다.

어린이만 두고 외출을 할 때는 라이터·양초 및 성냥 등은 어린이가 손댈 수 없는 곳에 보관하고, 라면이나 커피를 끓여 먹지 못하도록 가스렌지의 안전밸브를 잠그며, 다시 한 번 예방 주의를 환기시키고, 즐거운 마음으로 외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습관화하며 더욱 생활화 했으며 한다.

각 가정·차량·업소 및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백종희 / 소방안전관리자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정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b>호남신문</b>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b>회장·발행인 김평호</b> <b>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b>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